학습지 교사·보험 설계사에 회원확보·상품 강매땐 제재

공정위, 캐디·레미콘 기사 부당 이익제공 강요때도

1일부터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에게 학습지나 보험상품을 떠안도록 강요하거나 판매 및 회원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실적을 고과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면 고발이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나 레미콘기사에 대해서도 부당한 이익제공을 강요하거나 찬조금을 요구하고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등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에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지침에서 이들 4개 특고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5가지 행위유형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고에게 자기 또는 관계회사의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구입강제'에 해당된다.

지침은 사업자가 특고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뒤 재공급을 강요하거나 행사, 광고 등을 진행하면서 이들에게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이익제공 강요'라고 규정했다.

지침은 또 '판매목표 강제'와 관련해 사업자가 특고에게 판매 또는 회원 확보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실적을 인사고과, 보수산정 및 지급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계약감소에 따른 책임을 특고가 지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규정했다.

'경영간섭'의 유형으로는 사업자가 특고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내용이나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업무차량의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 제시됐다.

현재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보험설계사(19만5천명)와 학습지교사(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천명), 레미콘 기사(2만3천명) 등 4개 직종만 33만2천명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화물기사(35만명), 덤프기사(5만명), 대리운전자(8만3천명) 등을 합치면 총 9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저축銀 등 서민금융 고객 곁으로

예금 금리↑ 대출 금리↓ … 잇따라 조정

할부금융·저축은행·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잇따라 예금·대출 금리를 조정, 소비자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예금금리는 오르는데 대출금리는 내려가는 흔치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대형 저축은행들이 정기예금 특판을 진행 중이거나 최근 예금금리를 인상했다.

이달 들어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연 5.6%에서 5.8%로 0.2%포인트 올린 제일저축은행은 정기예금금리를 다시 한번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HK저축은행은 2천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6.1%를 적용하는 특판행사를 진행 중이다.

상당수 저축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들어 6%대로 진입하는 분위기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최근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연 5.8%에서 6.1%로, 모아저축은행은 5.8%에서 6.0%로, 솔로몬저축은행은 5.7%에서 5.8%로 상향조정했다.

환승론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의 영향으로 대표적인 서민대출상품인 신용대출금리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이자상한선이 9월부터 66%에서 49% 내려가게 되면서 2금융권의 금리 기준선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대형 대부업체들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지만 8월 중후반에 최고금리를 49%로 내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밀 빵만들기 체험 우리밀살리기 광주전남운동본부(본부장 최강은)는 지난달 31일 광주시내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사무실에서 학부모 및 학생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밀빵만들기 체험학교'를 열었다. 이 행사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계속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퇴직공제대상 공공 공사 5억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내년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이 '5억원이상 공공공사'와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주가 내는 납입금액이 1일 4천원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31일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퇴직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퇴직공제대상 사업장이 확대된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을 위해 1996년12월 도입된 제도로 지금은 10억원이상 공공공사와 300가구이상 공동주택 공사 등에 적용된다. /연합뉴스

평·돈 등 비법정 계량단위 미터법 사용

과태료보다 계도위주 정책 편다

오랜 관행인 평, 돈 등 기존 계량단위를 미터법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고 계도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법정 계량단위 사용 계도 대상을 중소 건설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생활정보지 등으로 확대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 부처들과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날 열린 법정 계량단위 정착 제3차 중앙-지방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법정 계량단위 정착의 실제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들의 조사 결과, 단속대상인 대기업과 공공기관, 귀금속 판매업소 가운데 75%는 사용단위를 법정 계량단위로 전환했으나 조사대상 업체들 중 법정계량단위 정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경우는 61%로, 실제 전환한 업체의 비율보다 상당히 낮았다.

또 한국갤럽이 전국의 성인남녀 1천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미터법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54.3%로 과반수였지만 불편하는 답변도 55.7%에 달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하되 비법정 계량단위를 계속 사용할 경우 구두주의와 두 차례의 서면주의,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1개월 단위로 실시해 충분한 시정기회를 줄 계획이다. /연합뉴스

해외부동산 투자도 납세의무 이행해야

국세청 안내서 발송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이미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2천600여명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안내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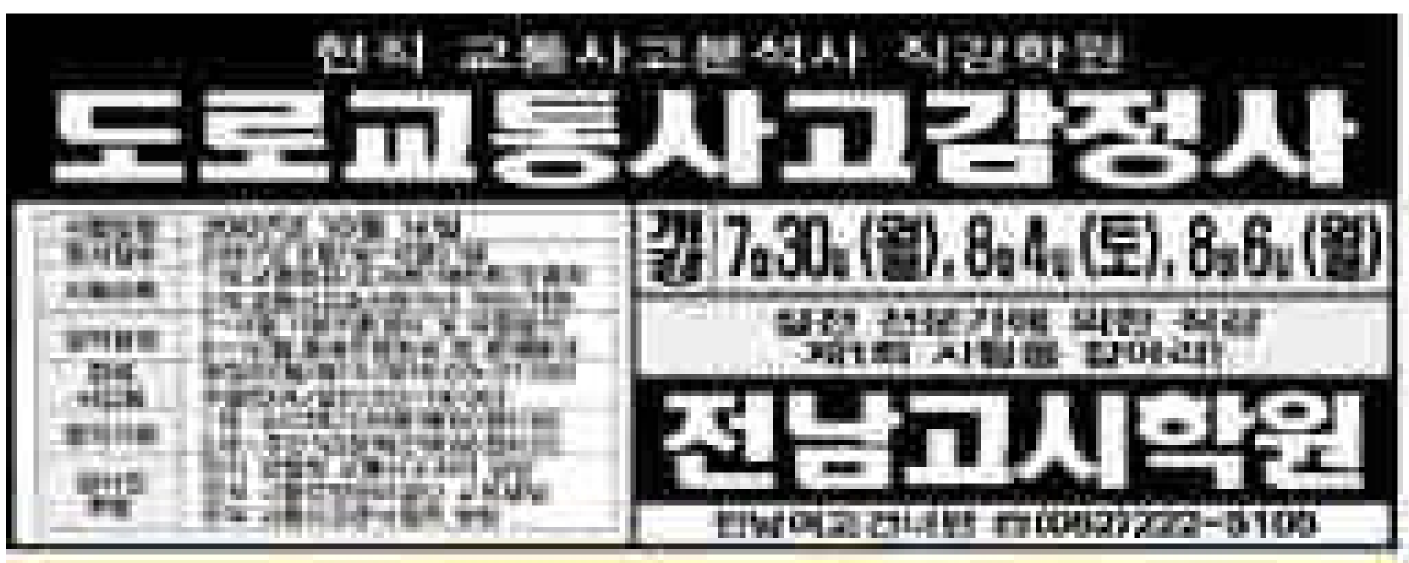
국세청은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에 팸플릿을 배포했고 자체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상세한 안내서를 게재했다.

한편 재경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신고기준)는 103억달러(2천848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1억5천만달러(2천568건)에 비해 44% 늘어났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월 수령액

100만원시대 열려

국민연금 월 수령액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감액노령연금 지급률이 2.5%포인트 인상되면서 가입기간이 20년이 안된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6명이 7월분부터 100만원 이상 받게 됐다고 밝혔다.

7월 연금액이 101만원이 된 정모(60)씨 등 6명은 모두 1947년생으로 올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월평균 수령액은 100만5천600원,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30개월, 납부보험료는 4천91만5천233원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